국회입법조사처 | 2024. 11. 14. | 제2286호
이슈와 논점
Issues and Perspectives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 자유주의 국제통상 질서의 위기와 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 -

정 민 정

2017년 제45대 미 대통령으로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국제통상 기조를 주도했던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다시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트럼프노믹스 2.0은 친환경정책을 축소하고, 전 세계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며, 미 중심의 제조업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IRA 시행을 고려하여 그간 미국 시장 진출을 활발히 한 한국의 친환경 산업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 ① 미국의 관세 조치가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제1기에 개정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홍보를 강화하고, ② 보편적 기본관세 이외에도 대규모의 대미 흑자 품목에 대한 추가적 관세 조치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③ 미국과의 군사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④ 수출 상품의 제조·공정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해외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⑥ 중국의 다량의 덤핑 판매에 대비한 기술·품질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⑦ 대체 수출처를 확보하여 제3국에의 중간재 수출 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4년 11월 5일 향후 4년간 미국의 경제·무역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수입이 아니면 대다수 소비재와 필수재를 획득할 수 없고, 수출이 아니면 외화를 획득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질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었다. 자유무역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트럼프 제1기부터 미국의 국제통상 기조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에 휘둘리기 시작했다. 과거 미국은 대한민국이 믿고 따른다면, 국제통상 관계에서 중간 이상 보장해주던 세계 패권국이었는데, 트럼프 제1기부터 교역 상대국이라면 동맹국인지를 묻지 않고 공격적인 통상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제2기 경제·국제통상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후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트럼프 제2기 경제·국제통상 정책 방향

트럼프노믹스 2.0의 주요 경제·국제통상 정책

NARS
www.nars.go.kr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저 자 정민정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02-6788-4552 minjch@assembly.go.kr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방향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1)]

[표 1] 트럼프의 주요 경제·국제통상 정책

정책 기조	• 미국 우선주의, 강한 미국
슬로건	•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경제 (재정·통화)	• 법인세율 인하 • 소득세 감세 • 연준 독립성 저해(초기 금리 인하 주장)
무역	• 보편적 기본관세(10%+α, 관세 무기화) • 국가 대 국가 협상(다자주의 부정적) • 전방위적인 보호무역 장벽 구축
대중 관계	•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지위 박탈 • 디커플링(Decoupling, 탈중국 강화)
산업·환경·이민	• 기존 친환경정책(IRA 등) 축소 • 제조업 부흥 • 반이민·멕시코 국경통제 강화

※ * : 외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항구적으로 허용하는 미 의회 법률의 명칭.

(1) 경제정책(재정·통화)

(감세 추진) 트럼프 제2기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트럼프 1기 때 도입했으나 2025년 실효 예정인 소득세 감세를 영구화하고, 감세로 인한 재정부족은 관세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것이다.

(금리 인하 압박) 트럼프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현 파월 의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등 연준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2) 무역 정책

(관세 인상)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도입할 것이다. 트럼프는 세계 최저수준인 미국 평균 관세율(3.3%)이 미국 제품의 시장경쟁력과 일자리, 근로자 임금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무역법 제정) 교역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복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3) 대중 정책

(완전한 탈[脫]중국)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면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을 통해 바이든의 디리스킹(derisking)[2)] 정책과 차별화할 것이다.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하여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고, 전자·철강 등 필수상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4개년 계획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율 관세 부과) 중국에 징벌적 관세율 60% 이상을 부과할 것이다.

(첨단 산업 규제 강화) 반도체 칩·장비 등 국가전략산업의 중국 수출을 전면 통제하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4) 산업·환경 정책

(제조업 지원) 미국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공급망에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장벽을 구축할 것이다.

(친환경정책 후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상 탈탄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며, 전기차 의무 판매정책을 폐지할 것이다. 대신 석유·천연가스·석탄·원자력 등 전통적 에너지원의 생산 확대와 인센티브 장려로 가장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3 한국 경제·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노믹스 2.0은 친환경정책을 축소하고, 전 세계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며, 미 중심의 제조업

1) Heritage Foundation,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2025 Presidential Transition Project, 2023, Ch. 21; 2024 GOP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최종 검색일: 2024.11.7.),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2024-republican-party-platform〉.

2) 중국과 협력·공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첨단사업 등 특정 부문의 위험 요소만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IRA 시행을 고려하여 그간 미국 시장 진출을 활발히 한 한국의 친환경 산업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3] 한국의 국제통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4] 한국의 수익(친환경 보조금, 수출) 감소, 비용(금리) 증가가 예상되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5]

(1) 신(新)에너지 관련 산업 피해

친환경 정책(IRA 등) 후퇴로 전기차·이차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산업은 피해가 예상되고, 석유화학·원자력 등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 산업은 수혜 산업으로 예상된다. 방위산업은 트럼프의 외교·안보 불개입 원칙으로 인해 전 세계 안보 위기가 가중되면서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다.[6]

(자동차) 대미 무역흑자(2023년 445억 달러)에서 전기차 수출의 기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트럼프의 전기차 전환정책 백지화로 일정 기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전기차 성장이 둔화하면, 미 진출 한국 기업들이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 대비 비교우위를 가졌던 전기차 시장 선도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차전지)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에 kwh당 35-45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인데, 트럼프 2기에서 IRA 축소와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위기가 예상된다. IRA 축소 시 미 진출 한국 배터리 사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한편 높은 기술력, 가격경쟁력, 핵심 광물 주도권을 보유한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패권을 견제함으로써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 트럼프의 화석연료 생산 규제 완화 추진은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의 요인이 되어 원가 절감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

(방위산업) 트럼프의 NATO 무용론 등으로 미국의 안보 우산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주요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각국의 국방 분야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방산기업 매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 전체적인 고금리 장기화

트럼프 제2기에서는 인플레이션 자극 정책 → 2024년 9월 인하된 금리를 다시 인상 → 전체적으로 한국의 금리 인하 제약,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된다([표 2] 참조).

[표 2]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 금융에 미치는 영향

예상 정책	영향	결과
대규모 감세·경기부양	국채 발행 증가, 재정적자 심화	물가상승 ↓ 美 금융긴축 장기화, 금리 인하 지연 ↓ 韓 금리 인하 제약, 고금리 장기화
관세 인상*	교역량 감소, 상품 가격 상승	
이민 제한	노동 공급 감소, 임금 상승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약 1.9%~10.4%까지 상승시킨다고 전망하고 있음.

※ 자료: 김영귀 외 6인,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4, p.15; EIU, "US election: its impact on US trade policy", 2024.6.12. 참조.

(3) 수출동력 약화

트럼프 제2기에서는 미 제조업 일자리 보호 최우선 →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 시행 →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제3시장에의 한국 수출 감소도 우려된다. 트럼프 2기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의 성장둔화·내수 침체가 지속되면, 중국이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초저가(超低價) 덤핑 수출 공세를 할 우려가 있다. 중 유통기업인 알리·테무가 직구 쇼핑몰의 전 세계 판매거점을 늘리며 초저가 공세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3) GDP 대비 수출 비중(%, 2022년): 한국 48.3 〉 일본 21.5 〉 미국 11.6.

4) IBK 경제연구소, 「미 대선 트럼프 당선 시 경제정책 변화 및 영향 전망」, IBK Issue Analysis, 2024, pp.5-6.

5) 김현범, 「다가오는 트럼프노믹스, 국내경제 영향과 전망」, IBK 경제브리프, 2024, p.1.

6) IBK 경제연구소, 앞의 글, pp.5-6.

[표 3]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예상 정책	영향	결과	추정액
韓 수출품 관세 인상 (+10%~)	미국 또는 미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국가로 설비 이전 증가 → 국내 제조업 공동화 심화	대미 수출 감소	152억*
中 수출품 징벌적 관세 부과 (+60%~)	中 성장률 저하로 한국 제품 수입 감소	대중 수출 감소	47억~63억
	중국의 제3시장으로의 초저가 공세 수출	미·중 외 제3시장 수출 감소	
제3국 수출품 관세 인상 (+10%~)	제3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 감소	미·중 외 제3시장 수출 감소	

※ * : 2023년 대미 수출금액(1,156억 달러)의 13.1%에 해당함.
※ 자료: 김현범, 앞의 글, p.1; 김영귀 외 6인,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4, p.16 참조.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하여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제3국의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3] 참조).

4 한국의 대응 방향

트럼프 제2기에 대비하여 첫째, 미국의 관세 조치가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며, 트럼프 1기에 개정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제1기의 성과로 한·미 FTA 개정을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미국 내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편적 기본관세 이외에 대규모 대미 흑자 품목에 대한 추가적 관세(「무역법」 제201조 세이프가드와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를 대비한 사전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 필수 공급망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력 분야는 전투함·핵잠수함과 같은 군수 무기의 생산뿐 아니라 인공지능·양자컴퓨터·우주기술과 같은 미래기술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은 대부분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바, 미국과의 군사과학기술 협력은 최첨단 상용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넷째, 수출 상품의 제조·공정 이력관리체계(원산지 추적)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을 겨냥한 제재 확대에 대비하여 공급망 전과정을 실사·추적·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또는 KOTRA 해외진출 지원사업단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해외진출전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중국 제재가 강화될 경우 중국 진출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 기업은 생산설비 해외 이전 시 중국 신규진출은 지양하고, 풍부한 원자재와 저렴한 인건비 등 강점을 가진 신흥국(인도, 베트남 등)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이 다량의 재고를 덤핑 판매할 것에 대비하여 기술·품질에 관한 우위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가격·비가격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체 수출처를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제3국에의 중간재 수출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6788-4510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0621-14
ISSN 2005-744X